

與野 공방에 '4월국회' 날 샌다

개헌·방송법·추경 등 대치

일주일째 '시계제로'

오늘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

4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생·개혁 등 각종 쟁점 법안은 물론 개헌과 국민투표법,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러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어 4월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4월 국회 파행은 의견상 방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됐으나 내부적으로는 개헌과 추경 등 휘발성 강한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연설 등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는 앞서 4월 국회 첫날인 지난 2일 첫 본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연계 처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9일 본회의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더라도 이 총리의 추경 연설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연설은 의사정족수와 관계없는 만큼 양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도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의 4월 국회 통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회 일정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일 오전 예정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조찬 회동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6일 국회로 넘어온 정부 추경안을 마냥 방치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되는 데다 야당이 대어(對與) 공세의 무대인 대정부질문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4월 국회 파행이 방송법에 더해 개헌 등 다른 현안과 연계된 측면이 강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하다. 이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들은 9일 조찬 회동에 이어 당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도 갖고 개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접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전망이다. 특히,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4월 국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응원 나온 유승민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일빌딩에서 열린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 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안 후보에게 운운화를 선물한 후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특위 재가동...개헌 '투트랙' 논의 탄력받나

여야 오늘 원내대표 회동...국회정상화 모색·개헌 논의 주목

여야 지도부가 개헌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그간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국회의 '투 트랙'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8일 "9일부터 헌정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1주일에 2~3차례 정도로 회의를 자주 열어 논의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헌정특위는 김 위원장이 앞서 지난달 28일 각 교섭단체의 개헌 당론이 제출될 때

까지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2주 만에 재가동 되는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곧 자당의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제출한 것이나 다름없는 입장이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최근 발표한 자체 개헌안에 대한 서류정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헌정특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10일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개헌 문안을 정리해 제출할 계획이며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합동 의원총회 등을 통해 공동개

헌안이 마련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다.

헌정특위는 우선 4월 말까지 국회 합의 안 마련에 전력을 다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2단계로 정부 발의 개헌안을 철회하도록 설득한 뒤 다시 합의를 이뤄보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당초 헌정특위 논의는 그대로 진행하되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투표 시기 등 4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하는 이른바 '투 트랙' 논의에 의견일치를 봤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9일 오전 정 의장 주재 정례회동에 앞서 별도의 조찬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구청장·군수·시의원 후보

김준성 선거사무소 개소...영광군수 재선 도전



김준성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는 8일 영광읍 옥당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영광군수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후보는 "민선 6기 군정을 맞아 군민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 청년이 돌아오는 영광, 잘사는 영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년간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군정의 중단없는 추진을 통해 반드시 군민이 행복한 영광을 완성해 나가겠다"면서 "민선 7기에도 영광군민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제4대 영광군의회 의장을 역임했고, 지난 2014년 7월 민선 6기 영광군수에 취임했다.

최형식 "군수 후보, 미투로부터 깨끗해야"



최형식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8일 "군수의 기본적 자질은 인권에 대한 깊이는 성찰이며,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는 미투로부터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담양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당 선거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군정이 중단되거나 흔들리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면서 "미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최형식은 당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후보는 지역상권활성화,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12대 공약'을 4일 발표했다. 그는 "담양 읍·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과 농어촌 중심지 사업을 병행 추진해 지역상권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성모 "합평군민 부농 성장 뒷받침 할 터"



김성모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예비후보는 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이개호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1500여명의 지지자와 군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예비후보는 "잘 사는 합평, 부자되는 군민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이를 위해 "3만 5000 군민 여러분의 화합과 단결된 힘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선진국의 농업현장을 찾아다니며 연구하고 농업의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에 왔다"면서 "창의적인 농업혁명으로 군민들이 역대 부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군민 행복'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북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8일 "북구 경제성장 100년을 지속시킬 기반을 세우겠다"면서 "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생산품 공동판매장을 설치해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이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 북구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조 후보는 "광주와 북구는 80년 5월의 협하고 어려운 때에도 주먹방을 나눴던 광주 대동정신의 산실이다"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은 북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에 대한 믿음과 협력의 바탕에서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는 광주와 북구 발전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진원, 강진읍 영랑로에 선거사무소 개소



강진원 강진군수가 9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문을 열고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사무소는 강진읍 영랑로 강진시의 버스터미널 2층에 마련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문식 지역위원장, 광역·기초의회 출마예정자, 각종 직능단체장 등 지지자 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수는 "대한민국의 성공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3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그만큼 행정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증거"라며 "재선을 통해 검증된 업무능력과 도덕성, 본선경쟁력 등 모든 부문에서 앞서고 있는 강진원과 함께 위대한 강진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호소할 예정이다.

조성철 전 남구청장 예비후보 "김병내 지지"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로 활동하다 최근 사퇴한 조성철 전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당 남구청장 예비후보인 김병내<사진>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조 전 후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과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남구의 경제 발전을 위해 힘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내 후보는 "조 전 후보의 지역을 향한 생각과 열정을 이어받아 남구를 더 크게 발전시키겠다"면서 "앞서 지난 5일 저를 지지해 준 성원출천 후보와 두 분을 응원해 준 모든 지지자 분들과 함께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삼호, 광산구 문화·관광·환경 공약 발표



김삼호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8일 문화·관광·환경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광주의 관문인 광산구를 매력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간부터 혁신하겠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해 광주시민이 즐겨 찾는 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광산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광주송정역, 광주공항이 있는 교통 중심지이자 광주의 첫 인상이 결정되는 곳이다. 시간과 자본이 많이 드는 정책보다 주민과 광주를 찾는 관광객이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경관 프로젝트로 '꽃밭 가구기'부터 먼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계절 꽃피는 광산 프로젝트로 도시미관을 바꿔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나윤, 광주시의원 출마 선언



김나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북구제6선거구, 건국·양산동) 예비후보가 8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후보는 "인권도시 광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성별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하고 싶다"며 "시민이 정책 수립의 주체가 되는 시민공동체 광주와 북구 자치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또 "북구 건국동과 양산동은 도농 복합도시라는 특성상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생활하고 영산강이라는 천혜 자연환경을 끼고 있는 다양성과 역동적인 곳이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